건설동향브리핑

제523호 (2015. 8. 10)

■ **정책 · 이슈**

· 2015년 하반기 건설기능인력 수급 및 임금 전망

· 한 · 미 · 일 부동산 보유세 비교 평가 및 시사점

■ **경영 · 정보**

· 2014년 세계 225대 설계기업 매출 동향 분석

■ **경제 동향**

· 7월 CBSI, 전월비 14.6p 상승한 101.3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교통세, 지속적 존치가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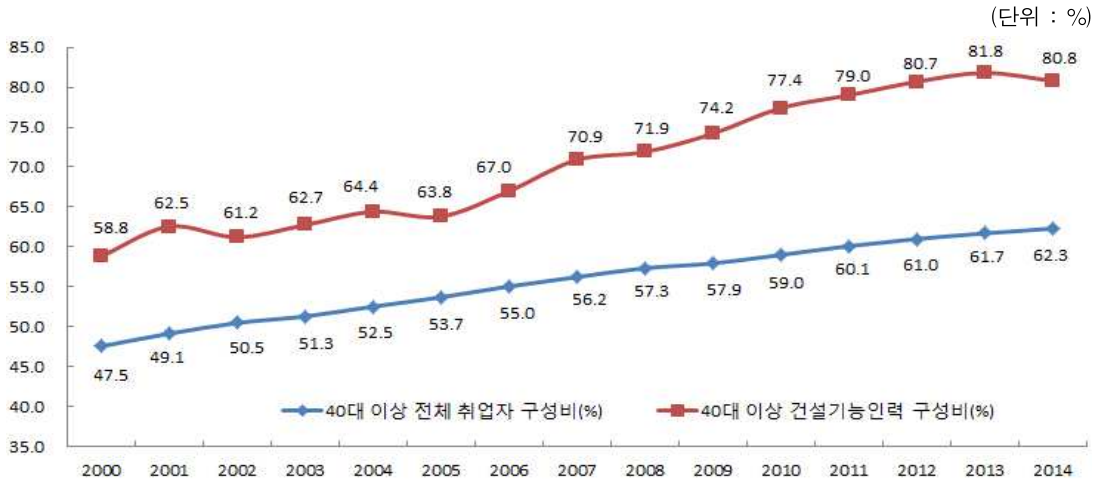
2015년 하반기 건설기능인력 수급 및 임금 전망

-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은 감소, 임금 상승세 지속 예상 -

■ 건설기능인력 고령화 지속, 내국인근로자 공급 풀 약화

- 2014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의 비중이 62.3%인 것에 비해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중은 80.8%임.
  - 전년 동기에 비해 1.0%p 감소하여 증가세가 잠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이므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임.
  -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4.8%p 증가해 고령화 경향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건설기능인력은 22.0%p나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기능인력은 육체노동을 수행해 일정 정도의 근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고령화는 품질 저하와 산재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주 : 기능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 2015년 하반기에 기능인력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국내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기능인력 수요는 전년 동기에 비해 3.2% 증가한 1,358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지속되는 고령화 추세와 젊은층의 진입 기피 심화로 공급은 1.1% 줄어든 1,101천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불법취업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공급이 작년에 이어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임금 상승세 지속 예상 : 숙련인력 7.5% 증가, 비숙련인력 4.5% 증가

- 2015년 하반기에 기능인력 수요는 증가하나 반대로 내국인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급 상황을 종합하면, 임금(하루 8시간 기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5년 하반기 숙련인력의 평균 일일임금은 전년 대비 7.5% 증가해 143,467원이 되고, 비숙련인력의 경우 전년 대비 4.5% 증가해 91,756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불법취업자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이들이 내국인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요인을 상쇄시켜 반대로 하락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2015년 하반기 건설기능인력 수요 · 공급 및 임금(8시간 기준) 전망>

(단위 : 조원, %, 천명,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설투자		196.33	93.28	105.11	198.39	94.41	109.93	204.34
건설 기능인력	수요(전체)	1,251	1,248	1,316	1,282	1,290	1,358	1,324
	공급(내국인)	1,125	1,102	1,113	1,108	1,083	1,101	1,092
일일임금 (8시간 기준)	숙련인력	122,994	129,464	133,458	131,461	137,491	143,467	140,479
	비숙련인력	84,071	86,686	87,805	87,246	89,720	91,756	90,738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건설투자		5.5	1.8	0.4	1.0	1.2	4.6	3.0
건설 기능인력	수요(전체)	-1.8	1.2	3.8	2.5	3.4	3.2	3.3
	공급(내국인)	-4.4	-1.7	-1.4	-1.6	-1.7	-1.1	-1.4
일일임금 (8시간 기준)	숙련인력	8.2	5.3	8.4	6.9	6.2	7.5	6.9
	비숙련인력	3.7	3.2	4.3	3.8	3.5	4.5	4.0

주 : 1) 건설투자는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2) 건설기능인력 공급을 내국인으로 국한한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도입 규모 및 단속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 변수이기 때문임.
3) 일일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숙련인력 임금은 11개 주요 직종(형틀목공 · 건축목공 · 비계공 · 조적공 · 미장공 · 방수공 · 타일공 · 콘크리트공 · 배관공 · 도장공 · 철근공)의 평균임금이며, 비숙련인력 임금은 보통인부의 임금을 의미함.
4) 2015년 수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연구위원 · gbshim@cerik.re.kr)

한 · 미 · 일 부동산 보유세 비교 평가 및 시사점

-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차별 철폐 및 재산세 저소득 노인층 배려 등 고려해야 -

■ 한 · 미 · 일의 부동산 보유세 비교

- 미국에서는 식민지 시대부터 다른 재산과 함께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독립 직후에는 모든 재산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일반재산세가 원칙이었음.
  - 미국의 재산세는 19세기 후반부터 부동산과 개인재산(개인 장비 등)에만 일반재산세를 부과하는 체제로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19세기 중반부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편익 원칙(Benefit Principle)에 입각하여 과세하여 왔음.
  - 편익 원칙이란 각각의 납세자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에 비례하도록 조세 부담을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접근법으로 응익(應益) 원칙이라고도 함.
  - 따라서,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편익 원칙은 공공서비스가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 한국과 일본도 20세기 중반부터 편익 원칙을 기조로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우리나라는 시 · 군 · 구세인 재산세, 일본은 市 · 町 · 村稅인 고정자산세)로 과세하였음.

-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새로운 부동산 보유세(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 일본은 地價稅)를 국세로 도입하는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해 부동산 보유세를 이용하였음.

- 한국 · 일본 ·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변천 과정을 비교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부동산 보유세 개선 사항

- 첫째,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에서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여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노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를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소유자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노인층에게 거주자 보유주택에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상속시까지 이연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대부분의 주는 거주자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죽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정 계층(노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서킷 브레이커'란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납세자가 지방정부에 납부한 재산세를 주정부가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미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에서 시행하고 있음.

- 셋째, 지방정부가 지역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에 대해 특별부과금제도를 도입해 일부 재원을 충당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에서는 지역개선 사업과 같은 공공프로젝트로 인하여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만큼 특별부과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음.

<각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과세 원칙	- 편익 원칙(재산세) - 부동산 가격안정이 중요한 목표가 됨(종합부동산세).	- 편익 원칙(고정자산세) - 부동산 가격안정이 중요한 목표가 됨(지가세).	-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편익에 따라 부과하는 편익 원칙
과세 주체	- 시 · 군 · 구(재산세) - 중앙정부(종합부동산세)	- 市 · 町 · 村(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 중앙정부(지가세)	- 주정부와 복수의 지방정부
세율 구조	- 지방세이지만 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함. - 주택, 토지, 건축물별로 누진세율 채택(재산세) -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별로 누진세율(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유형별로 상이한 단일세율(고정자산세)	- 지역마다 상이한 세율 구조 - 부동산 유형별 상이한 단일 세율 - 지방정부 예산 규모에 따라 매년 결정
(거주자) 주택에 대한 특례	- 과세표준 결정시 주택에 대해서 공정가격 비율을 토지 및 다른 건축물에 비해 낮게 적용함.	- 주택용지는 과세표준 결정시 우대하고 있음. - 일반 건물용지는 가격의 100%, 주택용지는 3분의 1, 소규모 주택용지는 6분의 1을 과표로 함.	- 일반적으로 거주자주택에 대한 세율 우대 - 상당수의 주가 소유자 거주주택에 대한 감세 제도인 '홈스테드 감세' 제도를 운용함. - 상당수의 주가 특정계층에 대해 재산세 부과액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초과할 경우 주정부가 재산세를 환급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를 운용함.

이의섭(연구위원 · eslee@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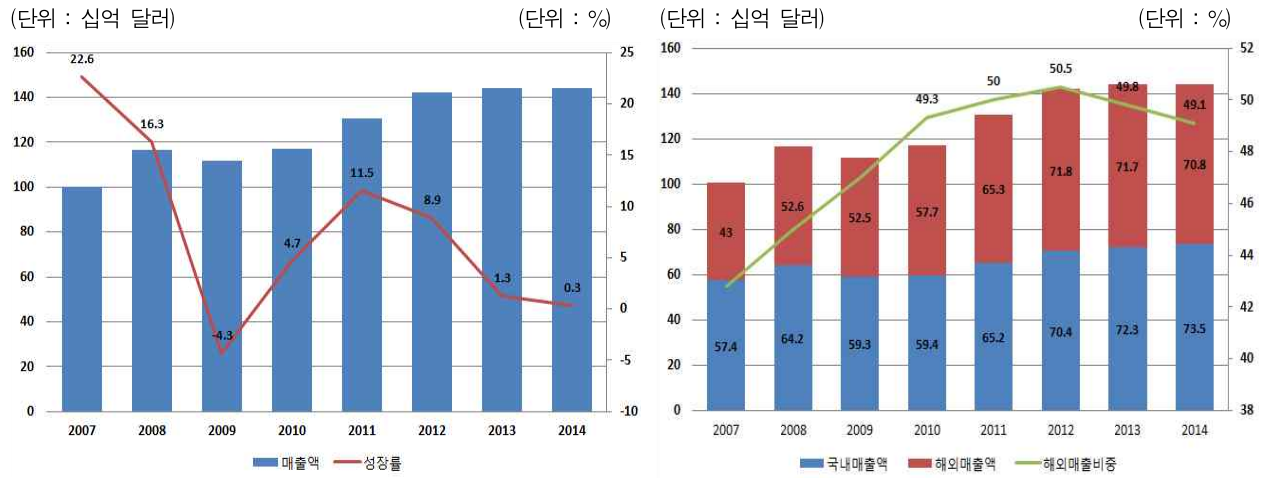
2014년 세계 225대 설계기업 매출 동향 분석

- 해외 매출 규모 전년 대비 1.1% 하락, 석유화학 부문 매출 하락세 지속 -

■ 전체 매출 전년 대비 0.3% 증가한 1,443억 달러, 국내 매출 상승폭 둔화

- 지난 8월 3일에 발표된 McGraw Hill의 「*ENR* 선정 세계 225대 설계기업(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1]」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설계시장의 매출(국내 및 해외) 성장세 둔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친 세계 설계시장의 매출 성장세가 2014년에는 0.3%까지 둔화되면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1.1% 하락한 708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49.1%를 차지했는데 2013년 49.8%보다 0.7% 하락함.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735억 달러로, 2009년 이후 지속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둔화됨.

<*ENR* 선정 세계 225대 설계기업 매출 및 성장률 추이와 국내 및 해외 매출 추이>



■ 북미 캐나다 및 중남미시장 매출 급락, 중동시장 매출은 증가

- 중남미와 캐나다시장에서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18.5%와 15% 급락해 44억 달러와 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아시아시장도 전년 대비 7.8%(15억 달러) 하락한 164억 달러

1) McGraw Hill에서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국내와 해외 매출의 합계를 기준으로 상위 225위까지의 설계 기업들을 소개하고 지역 및 공종별 매출 규모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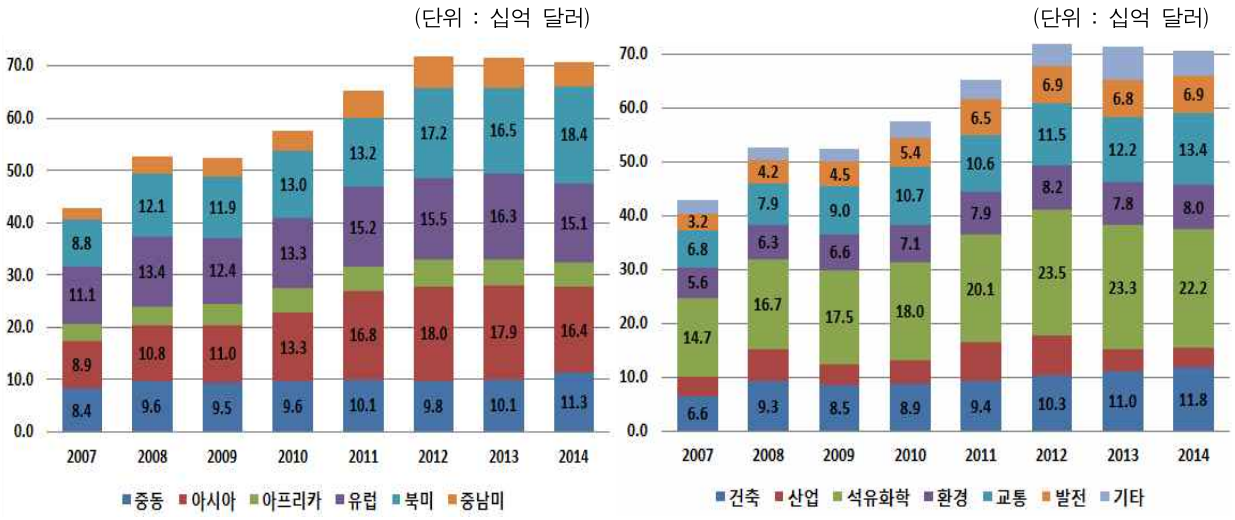
를 기록하며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 유가 하락으로 인해 오일샌드 프로젝트시장이 위축되면서 캐나다시장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중남미시장의 매출 감소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둔화에 따른 것임.
- 또한, 호주를 포함하는 아시아시장의 매출 감소는 중국의 경제 둔화와 그에 따른 호주의 경기 부진이 동반된 것이 원인임.
- 그러나, 미국시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면서 10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동시장의 매출 역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2% 증가한 11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석유화학 매출 규모 대폭 하락, 건축 및 교통 부문은 상승세 지속

- 공종별로는 건축과 교통 부문 상승세가 전년에 이어 지속된 반면, 석유화학 부문은 전년 대비 11억 달러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지속함.
  - 건축과 교통 부문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8억 달러와 12억 달러가 증가하였으며, 발전 및 환경 부문도 소폭 상승세를 기록함.
  - 반면, 2013년에 41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2년 대비 44.5%나 감소했던 산업 부문의 해외 매출은 2014년에는 36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하락세가 지속됨. 석유화학 부문도 235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지역별 해외 매출 추이 및 공종별 해외 매출 추이>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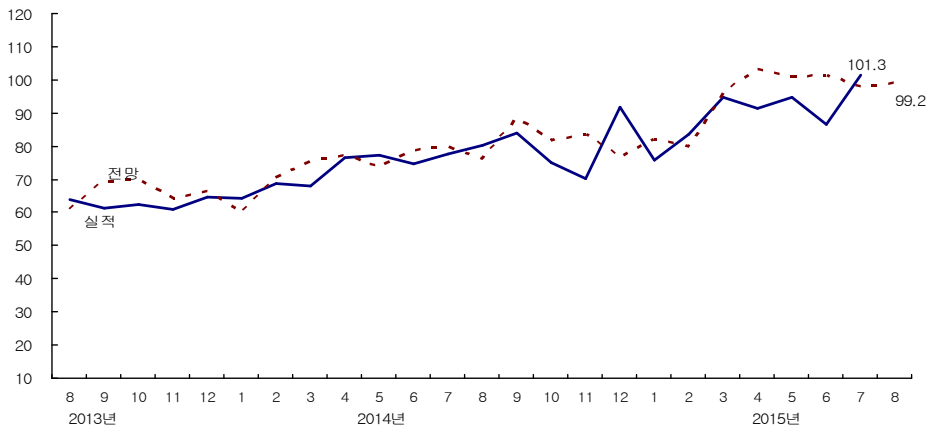
7월 CBSI, 전월비 14.6p 상승한 101.3

- 2002년 12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기준선(100.0) 상회 -

■ 주택경기 회복이 상승세 주도

- 2015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1]는 전월비 14.6p 상승한 101.3을 기록함.
  - CBSI가 기준선(100.0)을 상회한 것은 2002년 12월(102.0) 이후 13년 7개월 만임.
  - 지난 3월 이후 주택경기 회복, 신규 공사수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90선을 상회하다가 전월인 6월에 통계적 반락 효과로 86.7을 기록하며 잠시 주춤하였음. 그러나 7월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해 기준선을 상회함.
  - 통상 7월에는 혹서기, 장마로 인해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CBSI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0p 이상 상승한 것은 이례적임.
  - 이러한 상승은 신규공사 지수 중에서 주택공종 지수가 전월비 21.5p 상승해 115.2를 기록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주로 주택경기의 호조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혹서기에 접어든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의 호조세로 인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함. 다만, 규모별로 볼 때 2002년 당시에는 대형 114.3, 중견 97.7, 중소 92.5 등으로 비교적 유사한 수치를 기록한 반면, 현재는 대형 125.0, 중견 94.7, 중소 80.9 등으로 대형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양상이 다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 중견, 중소기업 지수 모두 상승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지수가 상승했는데, 특히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음.
  - 대형기업 지수는 주택경기 호조에 힘입어 전월비 25.0p 상승한 125.0을 기록해 2002년 5월의 142.9 이후 13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음. 또한, 대형기업 지수는 2001년 CBSI 조사 이래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비 2.8p 상승하여 94.7을 기록했음. 중견기업 지수는 지난 3월 103.1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여 84.2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15.6p 상승한 80.9를 기록해 전월에 보인 큰 폭의 하락폭(16.7p)을 거의 회복하였음. 지수 또한 80선을 상회해 2015년 초반의 50선에 비해 상당 수준 체감경기가 개선됨.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4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 합		83.9	74.9	70.4	91.7	75.8	83.5	94.9	91.4	94.6	86.7	101.3	98.2	99.2
규모별	대형	108.3	92.3	92.3	100.0	100.0	100.0	115.4	108.3	115.4	100.0	125.0	115.4	125.0
	중견	80.0	78.8	70.0	97.0	71.9	90.6	103.1	94.6	84.2	91.9	94.7	97.3	94.7
	중소	59.6	50.0	45.1	76.0	51.9	56.0	61.5	67.9	82.0	65.3	80.9	79.2	73.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8월 전망치, 7월 실적치 대비 2.1p 낮은 99.2 기록

- 2015년 8월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2.1p 낮은 99.2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낮은 것은 건설기업들이 8월에는 건설경기가 7월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아 대부분의 업체가 8월에도 7월과 유사한 체감경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다만, 실적치보다 전망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5년 들어 처음으로서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추가적으로 더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8. 7	해외건설협회	●'시장개척 지원사업 평가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손태홍 연구위원 참여 - 시장개척 지원 신청사업 평가 및 선정 등

■「국내외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현지화 전략 사례 및 시사점」연구 수행

- 연구원은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환경 악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8월 중에 「해외건설 현지화 전략 사례 및 시사점」연구보고서를 출판할 예정임.

- 주요 내용 1 :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지속성장을 위한 현지 지역기업으로서 네트워크 구축
  - 체계적인 해외건설 현지화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산업적 특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핵심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현지화는 기업 차원의 경영전략이지만 투자에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의 진출이 확대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

- 주요 내용 2 : 현지화전략은 기업경영시스템을 진출 환경에 맞게 변형, 운영하는 것임.
  - 현지화전략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은 생산, 판매, 유통 등 기능의 현지화와 현지사회와의 관계 형성 및 권한 이양을 의미하며 현지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글로벌 건설기업들의 현지화전략은 주로 시장진출의 용이성 제고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체계 완성이라는 목적 달성에 집중. 반면, 국내 건설기업들은 대부분 인력 활용에 집중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참조

■「CERIK 도서회원」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연구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 도서 회원에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정책 연구 자료 및 각종 연구 발간물, 정기 간행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수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교통세, 지속적 존치가 필요하다

1994년 도입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는 그 해에 2.5조원이 징수되었고, 2013년에는 13.3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현재 교통세수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 1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3%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전체 교특회계 중 85.1%가 교통세로부터 전입되었다. 교통세와 교특회계가 도입되면서 교통 SOC에 대한 재정투자가 안정화되었고, 이를 통한 교통 SOC 확충으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15년 12월 말에 3대 목적세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모두 폐지하고 이를 개별 소비세에 통합할 계획이다. 만약 교통세가 폐지된다면 교특회계의 핵심 재원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교특회계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된다. 교통세의 입법 취지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 SOC 시설이 갖춰졌다면 교통세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 SOC 시설은 충분하지 못하다. 교통혼잡비용은 2010년 28.5조원에서 2015년 33.3조원으로 증가했고, GDP 대비 교통혼잡비용의 비중은 2.16%로 미국 0.83%에 비해 높다. 2012년도 국가물류비는 GDP 대비 11.9%로 중국 18.1%에 비해서는 낮지만 미국 7.9%, 일본 7.5% 등 주요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물류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 5년 내 도로·철도 등 20년 이상 노후화 대상 교통시설물이 전체의 2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설물 유지·보수·성능개선 비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투자, 그리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핵심재원으로 교통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SOC에 대한 재정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교통세의 존치는 더욱 필요하다. 정권의 선호와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운영이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 SOC 확충은 막대한 투자비가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안정적 재원 확보 없이는 중장기 교통 SOC 투자계획의 달성이 어렵고, 적기의 시설 확충은 더욱 곤란하다. 이에 따라 교통 SOC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시스템적으로 받쳐주는 교통세의 존속이 필요하다.

박용석(기획조정실장·yspark@cerik.re.kr)